

시선

사설

핑계가 아닌 개선 노력을 보여줄 때

수강신청 대란이다. 수강신청을 둘러싼 학생들의 불만은 이번 학기에도 여김없이 반복됐다. 수강신청을 학년 별, 전공별로 수일에 걸쳐 시행했지만, 잔여인원이 너무 적어 강의 신청이 어렵다는 것이다. 강의 개수가 부족하니 수강신청 경쟁이 심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총학생회는 일부 단과대의 강의 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학습권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강신청 대란의 목소리가 끊인 적은 없었다. 최근 몇 년 강의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실제로 2012년 8,243개에서 2016년 7,462개로 꾸준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2년간 강의 수는 다시 증가해 8,400여 개 규모를 회복했다. 강의 수가 줄 때나 늘 때나, 수강신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상존했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반복된 셈이다.

이번학기 수강신청은 학교 측의 해명조차 학생들에게 가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의 수가 줄었다는 총학의 주장에, ‘졸업학점이 줄어 강의 수도 감소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줄어든 졸업학점이 고질적 문제인 수강신청 대란의 원인은 아닐 것이다. 수강신청 불만 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할 답변이 아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답변이 필요했다.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적의 학습을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다. 등록금이 몇 년째 동결된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다. 수강신청 대란을 해소할 만큼 당장 강의 수를 늘리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다.

머리를 맞대고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한다.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할 때 근본적인 불만은 줄어둘 수 있다.

실제로 대학주보는 2006년부터 수강신청 대란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확인된 것만 무려 14년째 언급되는 문제임에도 이렇다 할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 측은 비교적 최근 강의 매매라는 폐단이 나타났을 때 수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취소지연제’를 마련하는 노력을 보였다. 이젠 결가지만 처내는 식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 수강신청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해야한다.

학교 측은 강의 수요와 공급의 괴리를 해소하고자 노력해야한다. 현재 학교는 강의 수요를 예측한다는 명분으로 희망과목담기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과목담기는 사실상 학생 수강신청에 편의를 주기 위한 기능으로만 활용되는 상태다. 수요가 몰리는 것을 미리 확인해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이다. 고려대학교는 희망과목담기 기능을 통해 수요가 공급을 넘지 않는 강의는 자동수강 처리하고 있다. 일부 인기강좌를 제외하고 학생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대란을 완전히 잠재우는 건 아니더라도 수요를 일부분 분산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정답을 내놓으란 게 아니다. 정답을 찾아가는 노력부터 시작하잔 뜻이다. 이번 학기도 유아무야 넘어간다면, 고질적인 수강신청 문제는 또다시 정제되고 다음 학기에 반복될 것이다. 보다 본질에 가까운 새로운 시도를 위한 고민과 실천이 요구되는 때다.

정직한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완전한 경희

세시봉

이후승 <편집장>



“Honesty와 Integrity, 정직함과 완전함, 이 두 가지가 우리 경희대학교를 이끄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 지난달 27일 박영국 총장직무대행(대행)은 우리 신문 기자를 만나 이렇게 강조했다. 박 대행은 “문화세계 창조를 위해 우리 모두는 정직해야 하고 정직하지 않은 것은 완전하지 않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정직하다면 그 결과는 완전함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박 대행이 말한 ‘완전한 결과에 수반되는 정직한 과정’, 이는 현재 우리학교가 완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현안과 직결된다.

지난해 여름, 민주적 총장 선출 과정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 대표단이 모여 논의를 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학내 구성원은 그 동안은 이뤄지지 못했던 민주적 총장 선출을 앞두고 설렘했다. 하지만 어느새 1년이 지났다. 총장 선출 규정안(규정안) 합의가 이뤄지는 동안 많은 구성원이 우려를 드러냈다. 총장이 없는 모습은 지난 여름 수여된 학위증에 찍힌 총장직무대행직인으로 다시금 대표되고 말았다.

새로운 총장이 뽑히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 규정안 합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각 구성원 대표자가 본인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정안을 원했기 때문이다.

결국 협의 안에서 과정의 정직함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미 합의된 투표 비율을 임의로 조정해 구성원의 반발을 산 집단이 있는가 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집단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과정의 정직함이 부족했으니 당연히 완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지금의 답보상태

정직한 과정으로 해결 필요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득이 되는 상황을 반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규정안 합의에서만큼은 그 당연한 현상이 당연하지 않아야 한다. 2019년 기준 교원 1,434명, 교직원 428명, 학생 34,016명, 동문 약 30만 명이상이 우리대학을 이루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구성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이익만을 바라며 합의점을 외면하는 현실은 우리학교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직함과 완전함이 결여된 하나의 사안이

만들어낸 나비효과가 크다. 미래과학관, 글로벌타워 신축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은 답보 상태고 재정 문제도 우려의 대상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엔 학내 노동조합 간 갈등 등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총장이 없다’는 말로 해결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일들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법인 이사회에서도 별다른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구성원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간 합의 불발 소식을 들을 때 마다 우리학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자주 해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소식을 듣고 ‘그럼 그렇지’라는 말을 입에 달게 됐다. 구성원은 계속해서 미뤄지는 규정안 합의에 지쳐가고 있다.

박 대행이 기자와의 만남에서 강조한 정직함과 완전함, 이는 규정안 합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아니었다. 총장이 없는 현실에서 학교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대표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단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그 발언을 듣고 단 한 가지 바람을 퍼올렸을 뿐이다. 부디 정직한 과정을 통해 완전한 결과가 나오기를.

‘라면 논법’의 순기능, SW융합 교육의 완성을 위해

취재수첩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상황을 미리 가정해보는 것’은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다.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조금씩 그 폭을 넓혀 나간다. 바로 ‘라면 논법’이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서 저마다의 달콤한 청사진을 그린다. 마치 매 방학마다 ‘열심히 운동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면’이란 가정에서 비롯된 상상을 즐기듯 말이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SW융합학과)’는 라면 논법을 충실히 적용해서 설립된 학과다. SW융합학과의 출발점은 ‘사업에 선정되면’이란 가정에서였다. 실제로 SW융합학과가 신설되면서 ‘LINC+ 사업’, ‘SW중심대학사업’의 자격요건이 만족됐다. 학과 신설과 동시에 진행된 국고 지원 사업들은 다섯 학기가 지난 오늘까지 이어져온다. 그 과정에서 우리학교는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고, 이제 조금씩 수확을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SW융합학과가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끓여온 ‘라면’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사업의 중반부를 지나온 이 시점부터, SW융합학과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라면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사업이 종료된다면’이라는 매운 맛 라면이다. ‘사업이 종료된다면’의 맵기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단기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맵기의 정도는 SW융합학과의 내실화가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은 SW융합학과 이념에 부합하는 전임교원 증원이다.

최근 우리학교가 대규모로 교원을 늘려오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관된 기준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이 모자라는 점은 아쉬움이 따르는 지점이다. 전임교수는 학과의 방향성을 장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주체다.

특히 ‘실무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신설된 SW융합학과는 더욱 그렇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교원 채용이

필수적이다. 당장은 SW중심대학사업단 소속 산학겸임교수가 부족한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이들의 계약은 사업 종료와 함께 만료된다는 한계가 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책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SW융합학과의 교육 기반은 사업 종료와 함께 흔들릴 것이다.

SW융합학과의 내실에 빠져선 안 될 ‘양념’이 한 가지 더 있다. 사업 진행과 동시에 수반돼야 하는 것이 바로 학교의 지원이다. 실제로 SW융합학과의 교수 채용에 지원하는 실무 능력이 탁월한 기술자들은, 학과의 교육 이념에 아무리 부합한다 하더라도 교수 임용을 위한 자격요건 문턱을 넘기지 못해 그 뜻을 접고 마는 현실이다. 학교의 지원이 없다면, 이와 같은 사례는 계속해서 반복될 여지가 크다. 당장 우리 눈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SW융합학과와 학교의 충분한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

당장 보이는 성과에 안주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지금부터는 SW융합학과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 ‘사업이 종료된다면’이란 가정을 중심에 놓고 고민을 시작해보자. 전임교원 확충을 비롯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며 SW융합학과가 완성될 날을 기대해본다.

